



##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화 현황

김미화 연구원

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.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내 의료정보 전산화율은 높은 반면,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가 미미하고 의료기관별로 보건의료 정보화 격차가 크게 나타남.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 개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교류에서 더 나아가 개인건강정보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관련 정책과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-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
  - 특히, ICT 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료정보시스템은 공급자 주도의 전자의료정보(EMR)에서 표준의료정보(EHR), 더 나아가 개인이 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(PHR)로 진화하고 있음<sup>1)</sup>
- 우리나라는 EMR과 같은 의료기관 내 의료정보 전산화율은 높은 반면, EHR과 같은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보급률이 미미한 수준임
  - 2015년 기준 EMR 시스템 도입률은 71.3%로 높은 수준이나, 웹 기반 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4.8%에 불과함<sup>2)</sup>
    -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의료기관마다 정보화 수준이

1) EMR(Electronic Medical Record)은 하나의 병원에서 작성되고 통용되는 개인의료기록을 의미하며, EHR(Electronic Health Record)은 EMR이 한 단계 진보된 것으로 각각의 병원이 보유한 EMR을 통합한 데이터, PHR(Personal Health Record)은 개개인의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각종 의료 정보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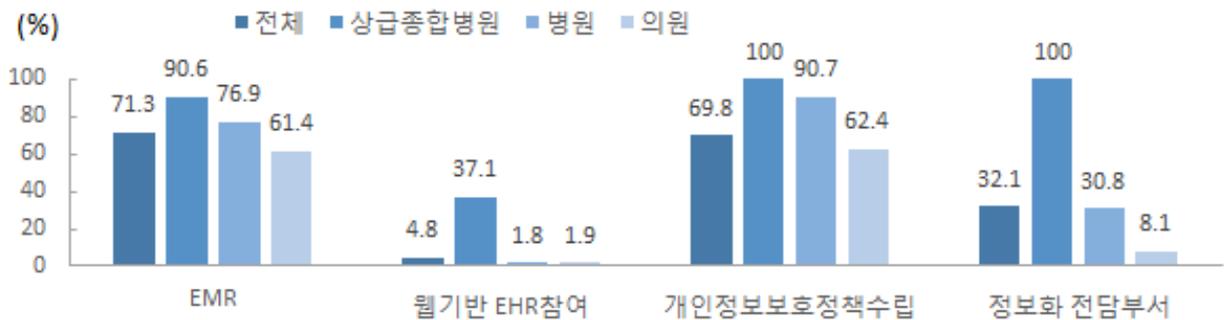
2) 한국보건산업진흥원(2016), 「2015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」

다르고, 사용하는 EMR 프로그램이 달라 의료정보 교류가 미미함

#### ■ 또한, 상급종합병원과 병·의원 간 보건의료 정보화 격차가 크게 나타남

- EMR 시스템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0.6%인 반면 의원은 61.4% 수준에 그침
  - 웹 기반 EHR 참여율은 병원 및 의원의 경우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37.1%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
- 전체 의료기관의 정보화 담당 전담부서 보유 비율 역시 상급종합병원은 100%에 이르지만, 병원의 경우 약 30%, 의원은 10%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
  -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90.7% 이상 수립된 반면, 의원은 62.4%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1〉 의료기관별 정보화 현황



자료: 보건산업진흥원(2016)

#### ■ 정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하고, 진료정보교류 시범 사업<sup>3)</sup>을 확대하고 있음

-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·회송서, 진료기록요약지, 영상의학관 독소전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·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음<sup>4)</sup>
  - 의료기관 간 상이한 EMR을 쓰더라도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사는 EHR 시스템이 내장된 EMR을 통해 표준화된 교류서식에 진료정보를 입력하면 됨

3)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(약물 처방기록, 검사기록 등)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,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됨

4) 2017년 1월부터 시행

- 정부는 20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<sup>5)</sup> 2017년에 기존 4개 거점에 2개 거점 병원을 추가로 선정했고, 기존거점의 협력 병·의원을 대거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표준기반 정보교류인프라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<sup>6)</sup>
  - 보건복지부는 2017년 말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1,322개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2020년까지 19개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개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EHR에서 더 나아가 PHR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관련 정책과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  - 개인정보보호와 동시에 개인건강정보의 사회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함
  - 또한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만큼 이들 의료기관의 정보 보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**kiri**

5) 2016년 12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

6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7. 5. 4)